

“RE100 산단 전남에 조성…에너지 흐름 바꿔야”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 포럼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전남 RE100',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기본소득', '국가 균형 발전'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전남도·신안군 공동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

국내 최대 규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를 100% 충족시키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도시를 전남에 조성, 지역 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전남의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는 전남도·신안군과 공동으로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남이 RE100 산단 유치의 최적지임을 선언하는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광주일보와 전남도, 신안군이 주관·주최하고 박지원·신정훈·이재호·서삼석·주철현·김원아·조계원·김문수·권항엽·문금주 등 10명 전남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포럼 개최식에 함께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미 관세협상차 출장 중인 김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신해 RE100산단을 담당하는 김호철 산자부 지역경제정책관, 각 지자체, 전력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에서 4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사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전기 소비)를 위한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하려는 전남의 혁신 전략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드러냈다.

김영록 전남지사 개회사
“서남권에 50만 에너지혁신벨트
전남에 에너지 신도시 만들 것”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환영사
“호남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선도시로 도약”

전남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정책 실현의 최적지임을 확인하는 한편, 산단 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 RE100 산업단지 활성화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또 전남지역 RE100 산단 조성에 힘을 실는 특별행사로 '전남 RE100 산단 및 에너지 신도시 성공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이뤄졌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8개 전력공기업, 한국RE100협의체,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전남개발공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등 17개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 산단 조성부터 기업 유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럼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해 '전남 RE100 산

단', '서남권 에너지혁신성장벨트 성공'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에너지 중심도시로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RE100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서남권에 50만명이 거주하는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등을 조성, 전남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미래 에너지 신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인·허가권 이양 등을 추진하는 데도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자치’를 명시하는 등 에너지 분권과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남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다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호남이 에너지 분권 시대를 맞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선도시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의 기조강연과 정책중 한국 RE100협의체 의장, 오현진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장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미래 비전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정책 세미나’도 열려 북극항로를 둘러싼 여수·광양항의 전략적 중요성과 실행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 전남에 구축한다

정부,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 등 조성

정부가 전남에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 기지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 등을 조성한다. <관련기사 2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을 통해 “재생 에너지를 전국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지금의 전력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소규모 전력망을 전국에 만들어 송전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분산 에너지 전력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 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 전남은 전력 자급률 2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5.19GW)과 잠재량(444.2GW)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김 실장은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한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으면 저장한 뒤 부족하면 다시 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소규모 전력망이다.

또 “전남에 있는 대학 캠퍼스와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에너지공대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판 실리콘 벨리가 될 수 있는 ‘K그리드 인제 창업 벨리’를 조성해 전력 분야, 전력 분야 인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양성하겠다”면서 “지역의 에너지 산업과 인재를 직접화해 ‘전력 산업 어벤저스’라고 할 수 있는 K재생에너지 원팀을 만들어 에너지 산업 선도 국가를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력 기술과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해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구상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주인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적용해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이나 학교 전기 생산에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100 산단 조성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란 뜻으로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이 태양광·풍력 등으로만 전력을 공급받는 산업단지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쌀·소고기 지켰지만 車 관세 ‘15%’ 아쉽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쌀·소고기 추가 개방 막아
‘최악은 피했다’ 평가
‘자동차 도시 광주’ 타격 우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내고, 자동차 관세를 15%선에서 방어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당분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4·9면>

또한 ‘자동차 도시’인 광주시 입장에서 12.5%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자동차 관세가 일본·유럽 등과 동일한 15%로 밀려남에 따라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예고했던 상호관세 25%

는 15%로 낮아졌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았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산 자동차에 새롭게 15%의 관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기대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업계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갖춘 ‘자동차 도시’ 광주는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유럽 등이 기존 2.5%의 대미 관세에서 12.5%p를 인상해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0%였던 우리나라는 12.5%로 결정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 입장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낸 점은 위안이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반도체·의약품 등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이 중 1500억 달러 규모 펀드는 선박 건조, MRO(유지·

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나라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조성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각 SNS를 통해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으며 양국 정상은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 경제계에선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세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의 자동차 관세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이미 글로벌 경쟁에 치열한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소비쿠폰 효과에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활기 ▶7면

복스 - ‘동양화가 처음인 당신에게’ ▶14·15면

전라도 외국인 - 통번역 지원 다문화 여성들 ▶22면